

새정치 당권경쟁 핵심 변수 문재인 의원 인터뷰

“당권도전 여부 내주 결정... 계파 전쟁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인지도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 노무현) 진영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당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당권 도전과 관련,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당권 구도는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광주일보는 10일 당권 도전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정치민주연합 위기의 원인과 대안은. ▲고질적인 분열과 갈등이 위기의 본질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과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내년 전당대회를 당이 변화하고 단합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당권 도전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다음 주 중반이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은 차기 대선을 고려하면 당권 도전은 독배라며 만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당을 살려야 대선도 있는 것 아니냐며 당권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대를 앞두고 ‘계파 전쟁’으로 인한 분열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게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다. 전대 구도가 변화와 화합이 아닌 분열과 갈등의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당권 경쟁이 시작되기도 않았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전당대회 국면이 본격화된다면 더욱 심화될 것 같아 걱정이다.

-문 의원이 출마를 접는다면 ‘계파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내가 안 나간다면 과연 당이 변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현재 상태로 가자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들이 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혁신과 화합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인가.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국민이 볼 때 당이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상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냥 과거 그대로 가는 모습으로 버티지 않을 까 생각한다.

-당권과 대권 분리론에 대한 입장은. ▲대선 후보까지 지냈는데 공천권이냐 당직 인사권에 관심이 있겠다. 당권은 당을 혁신해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대권은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니다. 대선은 당 살리기 전까지 다 있어야 한다. 현재의 당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대선을 얘기하나.

-계파주의 극복 방안은. ▲우선 누구는 안 된다. 배제의 논리는 당의 분열을 심화시킨다. 당권 도전에 나서는 분들이 계파 청산을 확실히 선언하고 대표나 지도부가 전횡할 수 없는 투명한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한 방



전대 혁신·변화 계기돼야

새정치 이대로 가면

호남민심이 버릴 것

신당론 실현 가능성 없어

법이다. -전대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법은. ▲당권 주자들은 물론 당원들도 이번 전대를 당을 살리는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계파와 분열을 말해서는 안 된다. 변화와 화합의 경쟁 구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또 다시, 분열 구도로 나선다면 국민적 외면을 받는다. -신당론에 대한 입장은.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전당대회에 이용하기 위해 유포되고 있다. 우선, 호남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분당의 상

처가 되풀이 되어서 안 된다. 단지 이기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논리를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친노 계파에 대해 인정한다. ▲정치 세력으로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 모임도 없고 어떤 지점으로 움직이는 게 파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가치를 같이 하는 성격이다

-친노 그룹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빠야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친노 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개혁, 진보 진영 전체도 편 가르기가 아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친노 그룹에 노무현 정신이 실종되고 권력에 집착한다는 지적이다.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친노 인사가 당내 권력을 잡은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해찬, 한명숙 전 대표 등이 당권을 잡았지만 기간도 길지 않았다.

-정치적 리더십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2011년 11월에 민주통합당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발을 딛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대선 패배 이후, 자숙의 기간을 지냈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정치적 확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감한다. 하지만, 대선 후보 당시, 윤여준 전 장관, 정운천 전 총리, 김덕룡 전 의원 등 보수 우파 인사들도 많이 선대위에 참여시킨 바 있다. 영남에서도 우리 당 지지를 넓히고 있다.

-호남 민심을 어떻게 보는지.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넘어 기대를 접는 포기, 무관심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호남 정신의 가치를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기록권이 됐다. 이번 전대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호남 민심이 우리를 버릴 것으로 본다. -시대를 관통하는 민심의 흐름을 정의한다면 ▲삶의 불안이라고 본다. 경제 성장도 한계에 이르고 일자리 등 고용 불안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도 심각하다. 국가적으로도 불안하고 개인적으로 삶이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 생활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한다.

-지역민ге 드릴 말씀이 있다면. ▲지난 대선 패배로 인한 호남 민심의 상실감, 고립감, 소외감이 컸다. 호남에 큰 빛을 쬐다. 정말 송구스럽다. 호남이 고립된 것은 호남이 앞서기 때문이다. 호남이 앞서가는 만큼 다른 지역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호남의 가치가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의 혁신을 통해 호남의 정신과 가치를 살려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업체 인건비 34억 착복”

참여자치21·노동당 시당 주장

“정비·관리직 숫자 줄여 예산 꿀꺽”

참여자치 21과 노동당 광주시당이 10일 성명을 내고 “광주 시내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 인건비 약 34억6200만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 560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0개 시내버스업체가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로 지급한 실제 금액은 526억1100만원으로 결국 나머지 34억6천200만원은 고스란히 업체 측의 이익금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 참여자치21 측의 주장이다.

임원들에게는 인건비를 과하게 지급하고, 정비직이나 관리직은 숫자를 줄여 이익금을 남기는 행태도 드러났다.

참여자치 21은 시내버스 업체 측이 정비직이나 관리직의 숫자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준공영제 예산을 남겨 착복하거나 임원 임금으로 돌려 지급한 것으로 설명했다.

참여자치 21은 이 같은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광주시의 영터리 행정지 원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들 관리·정비직 등의 인건비 지급 원가 상정시 2006년에 최초 조사한 필요인원을 최근 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 준공영제 예산을 지급하면서 정비직과 관리직의 숫자 감소와 임금을 상대적으로 줄인 업체가 그만큼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시는 부당하게 지원한 시민 세금 중 친인척이 대부분인 임원들에게 추가 지급한 6억여원의 돈을 뺀 41억1400만원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면서 “시가 매년 지원한 인건비의 원가 산정이 타당하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다양한 인재 등용” vs “비전문가 임용 노력”

전남개발공사 사장 자격조건 완화 눈길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공개모집에 나서면서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근무 경력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명시한 경력 사유가 없으면 사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남개발공사 측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전문가 임용을 위한 사전조치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10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임기 3년의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장의 직무는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농어촌 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 및 공공단지 개발사업 ▲주요 관광지 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유통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등이다.

이번 공모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공모에서의 경력 기준을 모두 없앴다는 점이다. 과거 전남개발공사 사장공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 임원 6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 2년 이상,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임원 2년 및 1급 이상 5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선임 연구위원·부교수 5년 이상

등의 경력을 갖춰야만 했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최근 열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들이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자산 규모 1조1882억원, 부채 6846억원의 대규모 공기업의 사장을 단순히 경력사유만 없으면 지원하도록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찾다면 별도의 조항을 만들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전남지사 2명, 전남도회의 의장 3명, 전남개발공사 이사회 2명 추천으로 구성됐으며, 후보자 2명을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월 초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추천 등의 과정을 거쳐 1월 말께 신입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전남개발공사는 전망했다. 신입사장은 방만한 전남개발공사의 부채 감축 등 구조조정, 기존 사업의 적자 탈피 및 수익 창출 등의 산적한 과제를 맡게 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의회,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10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대형 재난 재발방지의 모범사례로 남겨야 한다”며 “정부는 세월호선체를 인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000년 이후 침몰한 해의 선박 중 세월호의 7000t에 해당하는 15건 중 14건이 인양됐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선박이 침몰하면 인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도 대통령이 약속했던 당시의 간절함으로 돌아가 조속히 세월호 인양 방안을 확정하고 선체 인양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고 직후 골든타임 허비와 초동대처 실패로 더 많이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선체 인양”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세월호 사고 후 관광객 감소와 진도산수산물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가 돌면서 진도군민들이 삶의 피해자가 됐다”며 진도군민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Includes logo of Shanghai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OTOChina.

경품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Includes details about the award ceremony, priz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G Gold.